



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01

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5 지방7

해설 (×) 경성헌법은 개정이 힘든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개정이 쉬운 헌법이다. 경성헌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 외에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02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21 국회5

해설 (×)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제2절 헌법의 해석

1. 헌법의 해석

01

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1 법원

해설 (×)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2. 22. 2000헌바38)

02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에도,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와 보충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14 사시

해설 (×)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주>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2. 합헌적 법률해석

03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08 국가7

해설 (×) 합헌적 법률해석은 미연방대법원의 1827년 Ogden v. Saunder 사건에서 처음 행하여졌다.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해석원칙을 수용하여 확립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를 수용하였다.

04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1 국회5

해설 (○) (헌재 1990. 6. 25. 90헌가11) <주>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소극주의에 따라서 권력분립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해석이다.

05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20 경승

해설 (×)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주>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해석지침이지 헌법의 해석지침이 아니다.

06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그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되고 합헌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법률의 위헌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 21 국회5

해설 (○) (헌재 1990. 6. 25. 90헌가11) <주>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에 한해서 한정합헌, 한정위헌 등의 변형결정을 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다.

07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가급적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15 국회9

해설 (○)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주> 어떤 법률이 명백히 합헌이면 합헌결정을 하면 되고, 위헌이면 위헌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가급적 헌법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한다.

08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차원을 달리하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양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15 국회9

해설 (×)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 유형으로 본다. <주>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남한 정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이를 한정합헌결정이라고 한다.

09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최대한의 해석상 재량을 발휘하자는 것으로서 사법 적극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05 법행

해설 (×) 합헌적 법률해석은 사법 소극주의의 한 표현이다. <주>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법률을 판단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10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14 사시

해설 (×)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였다는 반성에 따른 헌법 개정사,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 (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판단할 때 잘못된 과거의 헌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고친 현행헌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리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1 비상계획관

해설 (×)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리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대판 2004. 8. 20. 2004다22377)

12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20 경승

해설 (×)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14. 88헌가5) <주>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할 한계이다.

13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자유규제입법에 적용된다. 05 법행

해설 (○)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주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신적 자유권 영역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자유규제 영역에서 주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이루어진다.

14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 08 국가7

해설 (×) [1] 정신적 자유는 헌법상 우월한 자유이므로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합헌성 추정이 배제되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배제된다. 즉 조금이라고 위헌의 가능성이 있으면 위헌결정을 하여 무효화시켜야 한다. [2] 반면에 경제적 자유는 상대적으로 헌법상 낮은 가치의 자유이므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합헌성이 추정된다. 즉 조금의 위헌 가능성만으로 바로 위헌결정을 하지는 않고 합헌적 요소가 있다면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 합헌결정으로 하여 그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킨다.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과 변천

1. 헌법 제정·개정 권력

01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10 국가7

해설 (○) 법실증주의자들은 등가이론에 따라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개정 권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02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8 서울2회

해설 (○) 법실증주의자들은 등가이론에 따라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개정 권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03

슈미트(C. Schmitt)는 헌법제정의 한계는 부인하나, 헌법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09 국가7

해설 (○)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별하여 제정권력은 한계가 없다고 보나, 개정권력은 제정권력에 의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04

통합론의 입장에서는 헌법개정을 역사적 변천 속에서 헌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헌법개정은 금지된다고 본다.

04 사시

해설 (○) 통합주의의 스텐트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헌법개정은 통합에 방해가 되므로 금지된다고 본다.

05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 서울2회

해설 (×)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요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과 앞에서 검토한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재 1995. 12. 28. 95헌바3)

06

헌법개정 of 한계를 넘어서 개정 헌법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할 권한이 헌법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02 사시

해설 (×) 헌법조항 자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조항에 대한 적용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

07

헌법개정 of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의 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18 국가7

해설 (○)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헌재 1995.12.28. 95헌바3)

2. 헌법의 개정

08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11 법원

해설 (×) 우리 헌법은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정책'에 한정하고 있어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09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18 서울1회

해설 (○) 어느 법규범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면 그 개정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10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06 입시,

해설 (×)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11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1 경승

해설 (○) 헌법 제129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19 서울1회

해설 (×)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13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15 지방7

해설 (×)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현행헌법 하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1 경승

해설 (×)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5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18 국가7

해설 (×)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6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1 국가7

해설 (×)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이다.

17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7 법행

해설 (×) 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8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0 국가7

해설 (×)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4 법원

해설 (×)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

현재 재적 국회의원정수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06 입시, 10 7급

해설 (○)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가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므로 국회 전체 재적의원 300명 중 1/3에 해당하는 100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개정이 가능하다.

2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수정의결 할 수 없다.

14 국회9

해설 (○)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개정안은 공고절차를 거친 이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국회의 수정의결이 허용된다고 하면 이는 공고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것이 되어 현행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22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0 법원

해설 (○) 국회법 제112조 제4항.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1 경승

해설 (×)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4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 국가7

해설 (×)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5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0 법원

해설 (○)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6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이를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확정된다.

13 서울

해설 (×) 헌법 제130조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7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6 지방7

해설 (×)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8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13 서울

해설 (×)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9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 법원

해설 (×)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헌법의 변천과 침해

30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에 괴리가 생긴 경우, 헌법개정은 그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헌법변천은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13 서술

해설 (×) 헌법개정과 변천은 모두 규범과 현실간 괴리를 좁혀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31

불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변천이 불가능하다.

14 국회9

해설 (×) 헌법변천이란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나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로 헌법 변천은 성문헌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문헌법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주> 우리나라 헌법변천의 사례로는 제1차 개헌 때 양원제를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원제로 운영한 것과 제5차 개헌에서 지방의 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관치자치로 운영한 것을 들 수 있다.

32

헌법의 개정은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천 및 헌법의 침해와 구별된다.

02 사시

해설 (×) 헌법개정은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 있다. 헌법변천은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 없다. 그러나 헌법침해는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예컨대 7차 유신헌법),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 없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쿠테타)

제4절 헌법의 보장

1. 헌법의 보장

- 01** 헌법보장의 대상은 성문헌법전에 한정된다. 04 국가
- 해설** (×) 형식적 헌법(성문헌법전)은 물론이고 관습헌법 등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헌법보장의 대상이 된다.
- 02** 대통령은 평상시에 헌법수호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비상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09 지방7
- 해설** (×) 비상시 헌법수호수단으로는 저항권과 국가긴급권이 있다. 따라서 비상시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수호기능을 담당한다.
- 03** 헌법의 최고법규성 선언, 헌법개정의 곤란성, 권력분립원리 채택, 탄핵제도 등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제도이다. 14 서울
- 해설** (×) 탄핵제도는 사후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한다.
- 04**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수단으로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기본권상실제도, 저항권, 국가긴급권 등이 있다. 04 국가
- 해설** (○)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민의 저항권, 대통령의 긴급권 등은 사후교정적 수호이다.
- 05** 헌법개정에 의해서는 헌법침해가 행해질 수 없다. 04 국가
- 해설** (×) 정부에 현혹된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되면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의 기본질서나 가치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저항권

06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발전되었고,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1789년 인권 선언에서 실정화되었으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17 법무

해설 (○)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0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7 서울

해설 (×) 자연인 뿐 아니라 단체도 저항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저항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08

헌법재판소는 헌법보호수단인 저항권이 체제개혁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다.

21 군무원5급

해설 (×) 체제 개혁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이 아니라 혁명권이다. 따라서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만 행사 가능하다.

09

저항권은 사회·경제적 체제개혁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11 지방7

해설 (×)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주> 평화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충성 원칙을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10

저항권이 행사되려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11 지방7

해설 (○)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경우로서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저항권 행사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주> 이를 보충성이라 한다.

11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14 국회8

해설 (○)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헌재 1997. 9. 25 97헌가4)

12

대법원은 저항권이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4 서울

해설 (×)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리나라의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 (대판 1980. 5. 20. 80도306)

13

소수의 특수집단을 중심으로 헌정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쿠데타는 혁명이나 저항권과 같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14 서울

해설 (×) 혁명권과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을 기초로 하지만, 쿠데타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14

국가권력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만 국민은 시민불복종운동을 행사할 수 있다. 14 서울

해설 (×)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경우로서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저항권 행사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시민불복종운동은 단순히 개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15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14 국회8

해설 (×)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4. 11. 12. 2003다52227) (주)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저항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방어적 민주주의

16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15 법행

해설 (○)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7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향하는 헌법보호의 수단이다.

05 행시

해설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가치상대적이 아니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18

방어적 민주주의는 그 출현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02 입시

해설 (×)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방어적·소극적이다.

19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 실효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해산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14 서울

해설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기본권 실효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만을 헌법 제8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0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반민주적이고 헌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해산된 예가 없다.

02 입시

해설 (×) 출제 당시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틀린 지문이 된다.



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 1948년 제헌헌법 (제1공화국)

01

1948년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회는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17 입시

해설 (×)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고, 국회는 단원제를 실시하였다. 1952년 제1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처음 규정하였으나 이때에도 실제로는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02

우리 국민은 1948년 7월 12일 헌법제정권력을 직접 행사하여 건국헌법을 제정하였다.

13 서울

해설 (×)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제헌의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03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

19 행시

해설 (○) 192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04

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16 국회9

해설 (○) 1948년 제헌헌법은 통제경제와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다.

05

1948년 헌법은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16 국회8

해설 (○) 1948년 제헌헌법은 통제경제와 사회주의를 실시하였다.

06

1948년 헌법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3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의 특별한 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16 국가7

해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07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법행

해설 (○) 1948년 제헌헌법은 형사피고인의 보상청구권을 두었다. <주> 형사피의자의 보상청구권은 1987년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였다.

08

국회의 양원제와 단원제가 지니는 각각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1962년 헌법 이래로 국회의 단원제가 정착되었는데, 1948년 헌법제정 이래 1962년 헌법개정 전까지는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04 사시

해설 (×) 1948년 제헌헌법은 단원제를 채택하였다. 1952년 제1차 개헌에서 양원제가 채택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의원내각제와 함께 양원제가 실제로 시행되었다.

1. 1952년 1차개헌 (제공화국)

09

1차 헌법 개정은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절충한 개헌안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개정절차인 공고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20 국가7

해설 (×) 1952년 1차 개헌은 발췌개헌으로 헌법개정절차의 하나인 공고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헌법개정이었다.

10

제1차 헌법개정(1952년 7월)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11 국가7

해설 (×) 제1차 개정헌법은 발췌개헌으로서 국회통과로 행하여졌다. 헌법이 정한 공고절차를 위배하였으며 국회에서의 토론절차도 생략되었고 국민투표도 하지 않았다. <주> 제1차 개헌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제2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필수 국민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11

헌법에서 최초로 양원제를 규정한 것은 1960년 헌법이다.

10 국회8

해설 (×) 양원제가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제1차 개헌헌법(1952년 헌법)이었으나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2. 1954년 2차개헌 (제1공화국)

12

1954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기준에 한 표가 모자랐지만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부결선포를 반복하고 가결로 선포하였다. 16 국가7

해설 (○) 1954년 제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위험적 개정이었다.

13

1960년 6월의 제3차 개정헌법(제2공화국)은 경제질서에 자유시장경제적 요소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11 국회9

해설 (×) 자유시장경제적 요소를 최초 도입 헌법은 제2차 개정헌법이었다.

14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는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21 경승

해설 (○) 제2차 개정헌법(1954년).

15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18 입시

해설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금지조항은 두었다.

16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그 권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16 서울

해설 (×) 제2차 개정헌법에서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의 찬성으로 국민발안권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17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민소환제 등을 규정하였다.

14 서울

해설 (×)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우리 헌정사에 규정된 적이 없다.

18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8 서울2회

해설 (○) 2차 개정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제약 영토변경에 대한 헌법조항을 개정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헌법은 개정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 1954년 헌법 제98조 ⑥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3. 1960년 3차개헌 (제2공화국)

19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20 비상계획관

해설 (×) 헌법위원회는 1948년 제헌헌법 당시에 있었고,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담당하였다.

20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18 국회9

해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21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의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0 법행

해설 (○) 1960년 제3차 개헌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적 법률유보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언론출판의 검열금지, 정당설립과 해산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였다.

22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5 국회9

해설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 도입 - 제3차 개헌 (1960년)

23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의 금지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13 국회9

해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의 금지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가 제4공화국 헌법때 삭제되었으나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24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17 입시

해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처음 설치하였다.

25

현행 헌법은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17 행시

해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정당조항과 위헌정당해산조항, 헌법재판소조항을 처음 규정하였다.

26

정당해산심판 조항은 제3차 개정 헌법(1960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래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18 국회9

해설 (×)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정당해산심판 조항이 최초로 규정되었고,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27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를 두었으며,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정당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회 단원제 조항을 두었다. 13 지방7

해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었고, 정당조항을 헌법에서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양원제가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제1차 개정헌법(1952년 헌법)이었으나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양원제를 규정하였고 의원내각제와 함께 실제 운영되었다.

4. 1960년 4차개헌 (제2공화국)

5. 1962년 5차개헌 (제3공화국)

28

1962년의 제5차 개헌은 국회의 의결 없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하였으며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12 국회**

해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으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개정절차에 따른 개정이 아니었다.

29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17 변시**

해설 (○)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30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19 입시**

해설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를 처음 규정하였다. <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

31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19 행시**

해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32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 때였다. **18 서울2회**

해설 (×)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54년 제2차 개헌 때였다.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33

1962년 헌법은 인권보장의 이념적 지표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고문금지 및 자백의 증거능력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09 국회8**

해설 (○) 1962년 제5차 개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규정하였다.

34

정당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둔 것은 1960년 헌법부터이고, 1962년 헌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12 변시

해설 (○)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강화하면서 정당조항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신설하였다.

35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19 국회8

해설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헌법은 제5차 1962년 헌법이다.

36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의무화하였지만,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6 사시

해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의무화하였으며,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6. 1969년 6차개헌 (제3공화국)

7. 1972년 7차개헌 (제4공화국)

37

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헌법 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규정하였다.

19 변시

해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을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와 국회의원의 제안한 경우로 이원화하였다.

38

1972년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16 서울

해설 (×) 제7차 개정헌법 제124조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39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9 국회8

해설 (×) 제7차 개정헌법 제124조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40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19 입시

해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제43조는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41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부칙에서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15 국회8

해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을 강조하면서 유신헌법을 단행하였다.

42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조항을 폐지하였다. 21 국회5

해설 (○)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였다.

8. 1980년 8차개헌 (제5공화국)

43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은 1980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10 국회8

해설 (○) 1980년 헌법에 처음 규정된 조항은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등이다.

44

1948년 헌법에서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으며, 1980년 헌법에서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09 사시

해설 (×)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근로자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적정임금의 보장을 규정하였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최저임금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45

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조항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20 국회8

해설 (×) 1972년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수정하기 위하여 1980년 8차 개헌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추구권, 환경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소비자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조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평화통일조항은 1972년 7차개정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처음 규정한 이래로 현행 9차 개헌까지 유지되고 있다.

46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18 국가7

해설 (×)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였고,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47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20 경승

해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48

재외국민보호규정은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13 국회9

해설 (○) 재외국민보호규정은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49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19 행시

해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행복추구권,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 소비자보호 등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9. 1987년 9차개헌 (제6공화국)

50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된 것은 제헌헌법, 1969년 개정헌법(제6차 개헌), 1987년 현행헌법이다. 21 법행

해설 (×)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제정된 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과 제9차 개정 헌행헌법만이다.

5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13 국회9

해설 (○) 현행헌법(1987년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52

1987년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16 국회8

해설 (○) 1987년 현행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전문에서 규정하였다.

53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로 채택되었다.

20 경찰경력경재

해설 (○)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54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21 법형

해설 (×) 형사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현행헌법에서 신설되었다.

55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재외국민보호의무를 신설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14 국회9

해설 (○)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은 재외국민보호의무, 적법절차조항, 형사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최저임금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56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21 국회5

해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행복추구권, 환경권, 적정임금제를 규정하였고, 최저임금제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57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군의 정치개입 폐단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18 입시

해설 (×) 1987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